

# 전남경찰 90%, 자치경찰제 도입 반대

## 김영우 의원, 일선 경찰 '자치경찰' 추진 거부감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의 90%가 자치경찰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의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일선의 경찰 공무원들은 자치경찰 추진에 대해 거부감이 심하다"며 "경찰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남의 경우 응답한 244명의

경찰 가운데 220명인 90.2%가 도입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총경 이상 고위직은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순경은 93.3% 반대, 경장은 응답자 전체가 반대, 경사는 94.7%가 반대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돼도 이동할 생각이 없는데 응답한 경찰이 91.4%에 달했다. 81.1%의 전남 경찰은 '자치경찰제 도입 후 치안사

비스 질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고 응답했다. 김 의원은 "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경찰공무원들은 세부내용에 모르고 있다"며 "신분변동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반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경찰들이 소극적이려면 홍보나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서 "또한 자치경찰이 담당해야 할 범죄종류, 민생치안 범위, 현장 대처 등이 막연한 상태로 진

행 중이다"고 지적했다. 김남현 전남청장은 "직전 자치경찰 추진단장으로서 동료들에게 새로운 제도를 많이 알리려 노력했으나, 설문조사 결과를 받고 보니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각 경찰서 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간담회, 전국 토론회도 많이 했지만, 어찌됐든 직원들이 이해 못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설명을 통해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 나주 배 원예농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 기소

나주 배 원예농협 A조합장이 지난 3월 13일에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되어 지난 9월 10일경 검찰에 기소됨으로써 앞으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합장 A는 조합직원 B등 직원들을 시켜 조합원 46명에게 굴비와 사과 등, 총 207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반면 C는 포상

금으로 1,91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A 조합장은 인터뷰를 통해 "제공된 선물은 이미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렇게 됐다"면서 "지금 조합이 배 수출 물량을 증대해야 하고, 부족한 저장고도 더 크게 늘리고 공판장을 활성화해서 조합원들의 소득증대에 힘써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아쉽고 조합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슈 판결

## 박정희정권 '구로농지 강탈사건' 소송 불법알선 변호사 2심도 무죄

박정희정권 당시 정부가 농민들의 땅을 강제수용한 '구로동분배농지 사건'과 관련, 피해자 600여명에게 소송을 불법 알선하고 수백억대 배상금 일부를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농민 유족대표 2명과 변호사 2명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10일 변호사 위법 등 혐의로 기소된 군용지 명예회복추진위원회(명추위) 회장 한모씨(73)와 간사 한모씨(69)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씨 등과 공모해 불법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55)와 김모씨(48)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 간사에게 적용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역시 1심과 같이 일부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한 회장과 한 간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구로공단 농지 강제수용 사건 소송 의뢰인 617명을 모집해 소송을 알선, 법률 사무처리 등에 대한 대가로 배상금의 5%를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명추위 회장 한씨와 간사 한씨가 구로농지 피해자 혹은 유족들을 사무실로 불러 변호사 김씨, 이씨에게 소송을 위임할 것을 권유했지만, 이를 독자적인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들은 명추위를 구성한 뒤 대표와 간사로 활동해왔고, 명추위의 의사결정은 임시총회 등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대부분 명추위 대표 및 간사로서 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이들이 배상액의 5%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 역시 알선에 따른 대가가 아닌 명추위 임원으로 인한 대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8년 10월 명추위 회칙에 따라 한씨 등의 보수는 물질적, 현실적 노력에 의해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한 사례비로 지급됐고, 금전 지급의 약정서도 과거 헌신과 현재의 노력에 의한 급여지급이라고 작성됐다"면서 "소송 관련 행위에서 승소하면 15%를 대리인에게 지급한 것과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분배농지 강제수용사건은 1961년 박정희정권이 구로공단 조성을 명목으로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 '검찰개혁' 촛불집회 내일 금남로서 열린다

검찰개혁을 위한 촛불집회가 12일 광주에서 또다시 터오른다.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은 12일 오후 6시부터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검찰개혁! 언론적폐청산!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하는 '광주시민 2차 촛불대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2차 촛불집회는 오후 5시 사전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6시부터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한다. 참여단체 발언과 시민자유발언, 대학생 율동공연, 노래공연 등의 분행사가 마무리되면 시민들과 함께 광주지검 앞까지 행진할 방침이다.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과 광주주권연대,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광주전남추모연대, 전남대학교교민노동동맹회, 통일외교 등은 논의를 통해 2차 촛불집회를 광주지검 앞이 아닌 금남로 일대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과거 5·18민중항쟁의 역사와 박근혜 퇴진 촛불을 밝혔던 거리에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촛불을 들 생각"이라며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많은 광주시민들이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5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검 앞에서 열린 광주지역 첫 촛불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시민 1000여명이 참가했다.



‘엄마표 마사지’ 시원해요 10일 임신부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나뉘더’ 행사에서 엄마와 아이들이 베이비 마사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 순천시민단체 “중학교 근거리 배정 방식 폐지해야”

순천교육공동체시민회의 등 20여 시민단체는 10일 “순천교육지원청은 중학교 근거리 배정 방식을 폐지하고 단일학군으로 학생 희망 100% 배정 방식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전남 순천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교육지원청의 학생 배정방식을 성토했다. 이들은 “전라남도교육청은 순천, 여수, 목포지역 중학교 무시험 배정을 전 지역 단일학군으로 학생 희망 100% 배정 방식을 고시했다”며 “현재 여수, 목포시는 단일학군으로 100% 배정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순천지역은 14년 전 순천교육지원청 교육 당국의 무능한 행정으로 인해 단일학군

배정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근거리 배정 방식을 시행하면서 매년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인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근거리 배정 방식이 계속될 경우 환경이 좋은 새로운 주거지역을 따라가며 선호 중학교가 바뀌면서 이기적인 민원은 계속 될 것”이라며 “원도심에 이어 현재 신도심지역 일부 중학교도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고 그 지역도 공동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단체들은 문제 해결 방식으로 “순천교육지원청은 근거리 배정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라남도교육청이 고시하고 여수시와 목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일학군 학생 희망 100% 배정 방식을 시행해 교육의 공정과 원

칙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또 “순천시도 이번 문제가 미래 지향적 도시계획 부재로 인한 도심간 불균형으로 나타난 문제임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교육당국과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순천시의회도 관심을 갖고 시의회 차원에서 균형 발전 방안의 원칙에 따른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부모들은 내 자녀 중심에서만 교육정책을 요구하기보다 교육공동체 전체 구성원과 환경적 측면에서 생각하기를 바란다”며 “내 자녀를 집 앞 동네만 알고 성장하는 작은 사람으로 키우지 말고 보다 더 넓게 멀리 세상을 보고 배우면서 큰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순천=김승호 기자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태치로구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인해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거운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은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 국가건강검진